

광주시, 핵심 인공지능 사업 탄력...정부 추경 191억 확보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충 자율주행 실증 환경 강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인공지능 관련 예산 191억원이 반영되면서 고성능 컴퓨터 자원 확충, 자율주행 실증 등 광주시가 추진중인 AI 핵심 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광주인공지능사업단은 29일 “올해 추경을 통해 191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해 광주 AI 집적단지지를 거점으로 한 서비스 개발 환경 고도화,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자율주행 기술 실증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30억원을 투입해 AI 집적단지 내에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한다.

전국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AI 시뮬레이션 클라우드 플랫폼과 자율주행 멀티 가상환경 테스트를 위한 서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대 500여개 자율주행 시나리오를 동시에 검증하고, 대형 시뮬레이터와 연계한 알고리즘 검증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한다.

96억원이 투입되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충은 AI 기업·공공기관·대학 등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GPU 33. PF(초당 1천조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연산 성능 단위)’를 추가로 임차해 총 77.7PF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H100과 H200(GPU) 464장을 4개월 치 기준으로 도입해 실질적인 AI 개발 현장의 수요를 충족할 방침이다.

국산 AI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증·평가 사업에도 65억원이 배

영됐다. 서버·엣지용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금융·의료·제조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실증을 통해 상용화를 앞당긴다.

이를 위해 고도화된 검증 장비 2종을 새롭게 도입하고, 4개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별 적용 가능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이번 국비 추가 확보로 AI 집적단지 인프라 고도화, AI반도체 국산화 등 AI 산업 생태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고성능 컴퓨팅자원을 대폭 확충하고, 자율주행 실증 환경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광주 동구, 건강 여름나기 캠페인

29일 광주 동구 푸른길 산수마당에서 열린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에서 임택 청장과 주민안전담당관, 지역자율방재단원 등이 주민들에게 시원한 물과 부채, 쿨도시 등을 나눠주고 있다. 김태규 기자

김영록 지사 “국정과제 채택·국비확보 함께 뛰자”

민생 소비쿠폰 신속한 소비 적극행정 문화 확산 등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2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소비 분위기 조성과 지역 핵심현안의 새 정부 국정과제 채택,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경제활력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모든 도민이 빨리 신청해 소비하도록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역 핵심현안의 국정과제 채

택과 내년 국고예산 확보가 함께 맞물려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가 반드시 하겠다는 공약사항이 국정과제에 잘 반영되도록 막바지 노력에 온 힘을 쏟자”며 “특히 기획재정부 정부 예산안의 실질적 초안이 8월 초 마무리되는 만큼 실국에선 이번주 내로 어려운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해 지사, 양 부지사에게 함께 뛰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이는 비단 공직자의 잘못만은 아니다. 그동안 정당한 일을 했더라도 정책감사로 징계를 하거나, 직권남용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등 적극행정을 할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새 정부가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를 추진키로 한 만큼 여기에 발맞춰 적극행정을 장려할 실질적 대책을 세워 시행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보장, AI 기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실제 활용 확대, 실력·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정착 등 일하는 공직문화를 주문했다.

최근 극한호우 피해와 관련해선 “특별재난지역이나 우심지역으로 선정된 곳뿐 아니라 적은 피해가 있는 일반지역까지 빠지지 않게 조사를 꼼꼼히 하고 피해복구 등에 국고가 지원되도록 적극

건의하자”며 “피해지에 대한 항구복구가 이뤄지도록 잘 챙기라”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도·시군의 적극적인 인권교육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 선제 대응 △여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년 정부예산 확보 △광양국가산단 등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에너보다 빨리 나타난 벼멸구 신속 방제 등을 당부했다. 정근산 기자

기사제보받습니다. jndnnews@naver.com

조옥현 도의원 “전남 농어촌 ‘식품 사막화’ 대안 필요”

영광·순천 등 90% 이상 분류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등 주문

전남 농어촌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 사막’이란 신선한 식품을 살 수 있는 상점이 부족해 먹거리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뜻한다.

2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관광문화위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전남 열린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영광·순천 등 주요 지역의 90% 이상이 식품 사막으로 분류되는 등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영광군은 전체 292



개 행정리 중 269곳(92%)이, 순천시는 405개 행정리 중 371곳(91%)이 식품사막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안역할을 하던 전통시장마저 잇따라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식료품 구매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전남지역 전통시장은 95개로, 최근 10년 사이 20곳이 소멸했다.

조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은 한끼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지만 대중교통은 턱없이 부족하고, 도시에서 흔히 이용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도 사용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조 의원은 그러면서 △식품사막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남형 조례 제정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주민 체감형 생활복지사업 추진 △농협-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공동운영 모델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면 식품 사막 문제 해결과 지역 기부 활성화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농협과 지자체, 사회적기업이 힘을 합친 안정적인 공동운영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정주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다”며 “전남이 식품 사막 해소 정책의 모범적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신승철 도의원 “농어촌 고령층 성범죄 특단대책 시급”

최근 4년 전국 3500건 발생 치안 인프라 등 안전망 촉구

농어촌 지역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전남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지역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61세 이상 고령층 대상 성범죄



는 전국적으로 총 3,500여건 이상 발생했다”며 “이는 하루 평균 2건 이상 발생하는 충격적인 수치”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며 “치매 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같은 마을 이웃이나 유력 인사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고령층 성범죄의 원인으로 △농어촌의 취약한 치안 인프라 △마을 내 시선과 편견으로 인한 은

폐구조 △미흡한 신고 체계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찾아가는 예방 교육 강화 △익명 신고 시스템 활성화 등 신고 체계 개선 △특거 고령 가구 대상 홈캠 설치 지원 및 치안 인력 확충 △마을 리더 중심의 공동체 안전망 구축 등 4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